

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마련 연구

- 요약 -

제1절 연구 개요

1. 연구 목적

-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음.
 -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은, 지역 복지여건 현황분석, 범정부 과소지역 지원 정책 동향분석,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지원모델 도출로 구성됨.
-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
 -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(복합적·만성적 문제)가 지리적 또는 공간적으로 범위에 따라 밀집되어 분포하는 현상은 사회적 배제의 한 단면임.
 - 연구에서는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과 국내외 경험적 사례를 제시함.
-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법적 근거 및 보완사안 검토
 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보장급여법”) 및 동법 시행령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를 살펴봄.
- 사회보장 관련 균형발전 및 과소지역 지원정책 사례
 - 의료취약지역 사업, 고용재난지역 사업 등 사회보장 관련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검토함.
 - 전북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책 사례를 분석함.
 -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발전방안을 살펴봄.

□ 지역 복지자원 실태분석

- 지역 복지여건 진단을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, 산출&성과(수요 대비 공급)를 보여주는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복지자원을 분석
- 기초생활수급자 수, 소득수준 자료, 임대주택 규모 등을 활용한 공간분석

□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지역 분석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, 임대주택 규모, 사회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지역 분석
-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GIS 분석

□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 모델 마련

-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 개념 및 추진방향, 예산 지원방법, 사업 내용, 사업추진 체계 도출
- 향후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 점검

2. 연구 방법

□ 기존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

-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균형발전 정책 자료 분석

□ 지역복지 실무자 정책의견 수렴

- 심층인터뷰(FGI)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모델 관련 의견 수렴

□ 지역복지 수준 및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분석

- GIS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수준 및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의 신청가능지역 분석

제2절 연구 결과

1.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 사례

□ 지역단위 과소지역 지원정책 동향 분석

○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집중은 그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나 역할모형을 제공하게 됨.

- 개인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동네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어는 주어진 시점에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·물질적·문화적 자원들의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동네효과(neighbourhood effect)가 발생할 수 있음(곽현근, 2007).

○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(복합적·만성적 문제)가 지리적 또는 공간적으로 범위에 따라 밀집되어 분포하는 현상은 사회적 배제의 한 단면이며,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노력을 다양하게 전개됨.

-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약속지대 사업과 컬렉티브 임팩트 사업, 그리고 우리나라의 희망플랜 사업을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사례로 선정하여 검토

□ 오바마 행정부(Obama Administration)에서 추진된 약속지대 사업은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(place-based approaches) 프로그램임.

○ 이전에 추진되었던 Harlem Children's Zone(HCZ)의 성공사례를 확대 실시하였음.

○ 노스캐롤라이나 'Healthy Places North Carolina'사업의 추진을 지역 내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에 사업의 수행이 결정

□ 2011년 『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(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)』에 “Collective Impact”라는 논문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, 개념적인 논의가 지속됨.

○ 컬렉티브 임팩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내 안착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의 충족이 요구됨

- 첫째, 공통의제의 발굴 및 형성이 필요함, 둘째, 공통의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, 셋째, 상호협력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, 넷째,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기관간 협력체계의 공고화, 다섯째, 사업수행을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중추지원조직의 요구됨.

□ 한국의 빈곤의 대물림 차단사업(“희망플랜”)은 전국 11곳에서 14~24세 아동청소년 100명씩을 대상으로 총 1,147명 참여한 사업임.

○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 모형으로 청소년 및 그 가족중심의 사례관리 모델로 운영되었고,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서 복지운동형 및 지역활동형을 포괄하고 있음.

2. 사회보장 특별지원 사업의 법적 의의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보장급여법”) 및 동법 시행령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
○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. 12. 30. 제정된 이래 위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음.

□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 주체

○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음.

-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하는 구역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음.

□ 구역지정의 대상 내지 사유

-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면 (1)「공공주택 특별법」상 영구임대주택단지, (2)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, (3) 그 밖에 보건, 복지, 고용, 주거,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임.
 - 소득층 및 밀집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지역의 낙후성 내지 취약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, 구체적인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상존함.
- 이러한 이유는 지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구역지정여부에 대해 각 지역이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과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됨.
 - 여기에서의 재량성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도의 '내용형성'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, 그 '실시여부'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.

□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심의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, 통보

-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).
- 지정기관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(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 제2문).
 - 문언의 취지상 이 때의 협의는 '사전' 협의를 의미함.

□ 법률 제48조 제1항 1문은 '지원 할 수 있다'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이 가능한지 확정되어 있지 않음.

- 다만,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은 지원할 수 있음.

□ 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의 헌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

찾을 수 있음.

-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적 근거는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의 근간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임(헌법 제34조).
- 다음으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이 근거가 됨(헌법 제11조).
-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과 적정소득분배,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경제조항이 근거가 됨(헌법 제119조 제2항, 제123조 제2항 등).

□ 아직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,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종래의 지역단위 사업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, 다양한 욕구결핍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‘사회적 실험’이라 할 수 있음.

- 그러나 여느 정책적 실험과는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구체적인 법률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함.
- 이에 ‘실험’은 적극적으로 하여야만 미래의 발전에 유익한바, 이를 위해서 현행 법령을 다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.

3.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

□ 지역 사회서비스 수준 분석 개요

-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측정단위로 하여 서비스 수준을 확인함.
-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대분류 3개(수요, 공급, 산출성과), 중분류 7개, 소분류 21개, 세분류 6개로 구분되며, 평가지표는 총 40개로 구성하였음.
-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이를 위해 복지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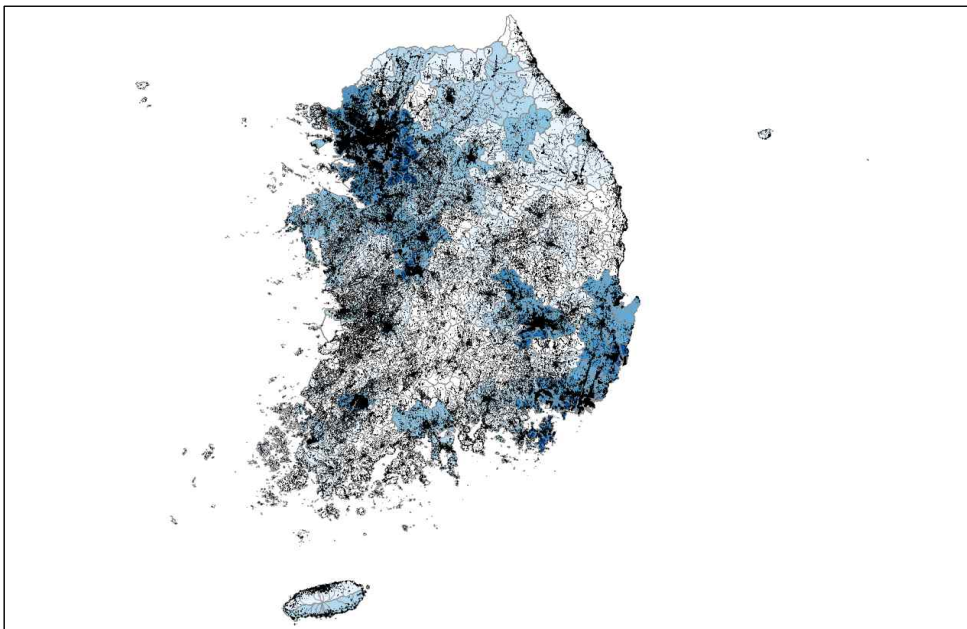
□ 서비스 수준 측정 (붙임1 참조)

- 종합수준, 서비스 수요 편차, 서비스 공급편차, 서비스 산출 성과 모두 대도시형이 가장 평준화 되어 있음.
- 종합수준, 서비스 수요 편차는 제한도시형, 중소도시형, 도농형, 농촌형 순으로 농촌형이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.
- 서비스 공급 편차의 경우는 중소도시형, 도농형, 농촌형, 제한도시형 순으로, 제한도시형이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.
- 서비스 산출 성과는 중소도시형, 제한도시형, 도농형, 농촌형 순으로, 농촌형이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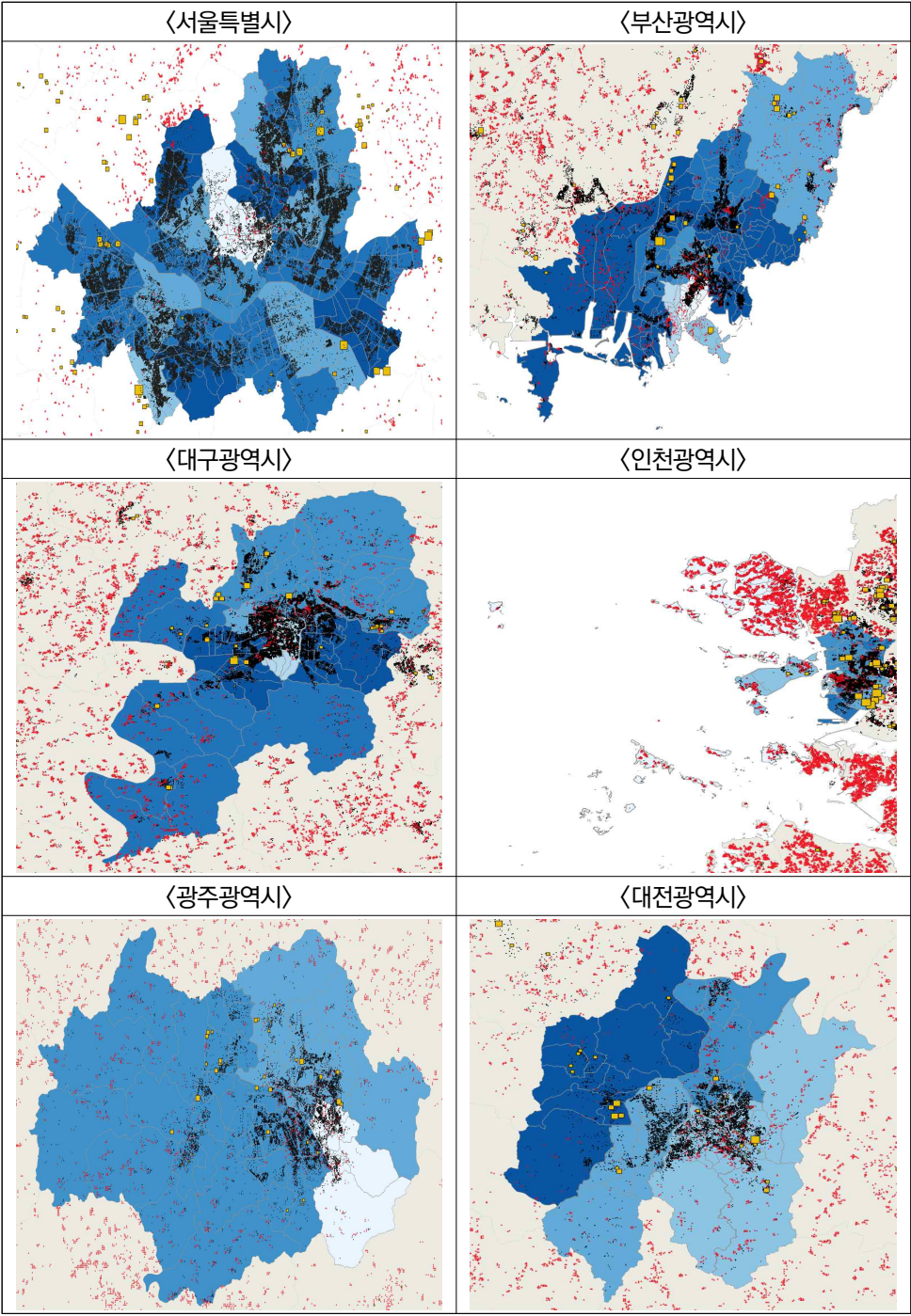
□ 기초생활수급자 분포

-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분포와 사회서비스 수준분석
 - 전국 단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,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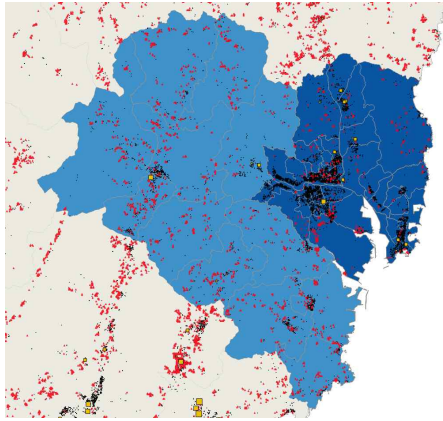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분포와 사회서비스 수준분석: 전국단위 분석 (보고서상 [그림 4-6]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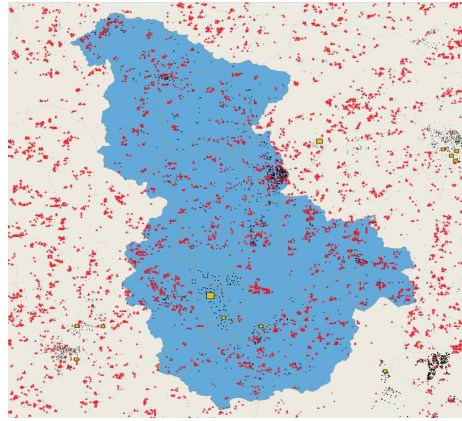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분포와 사회서비스 수준분석: 광역시도별 (보고서상 [그림 4-6] ~ [4-23]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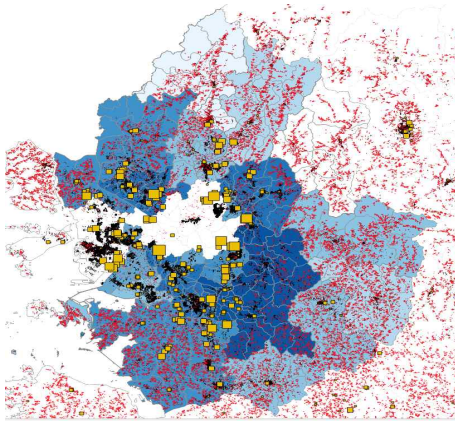
〈울산광역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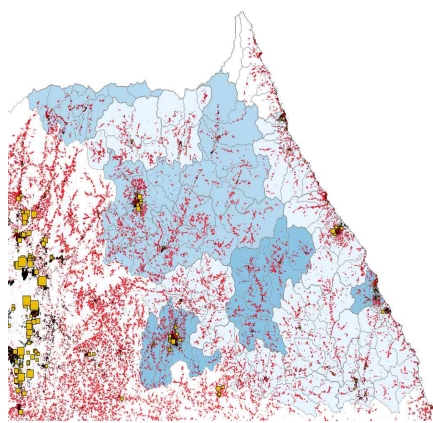
〈세종특별자치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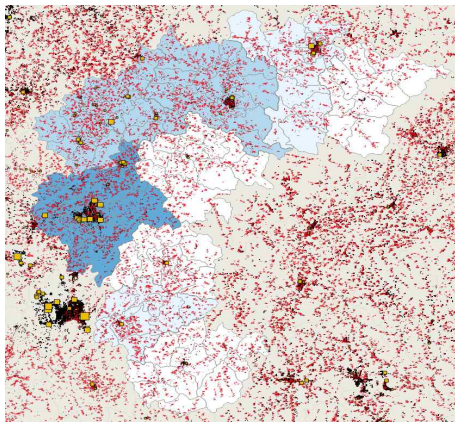
〈경기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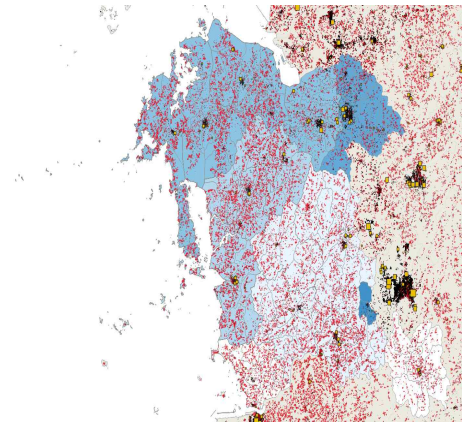
〈강원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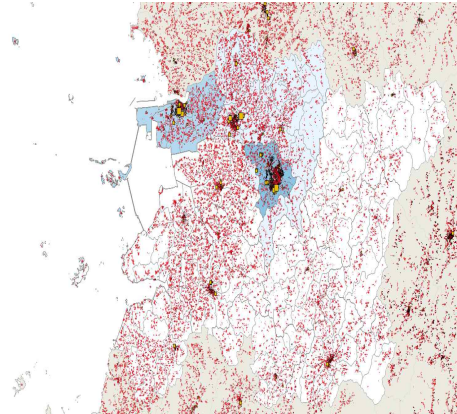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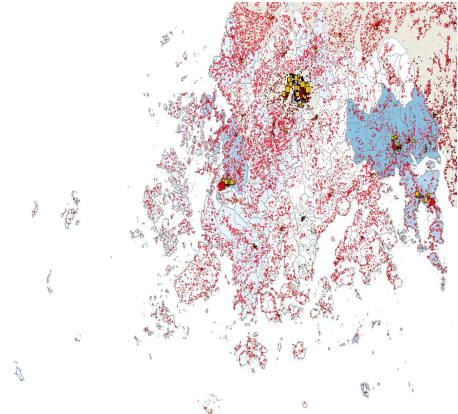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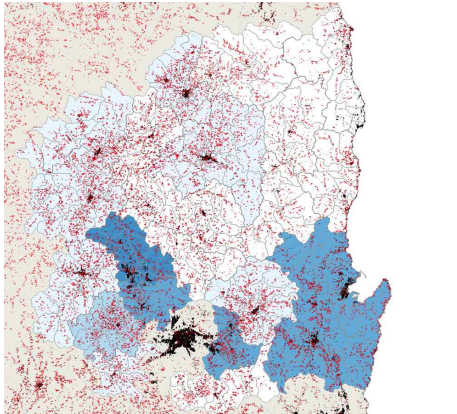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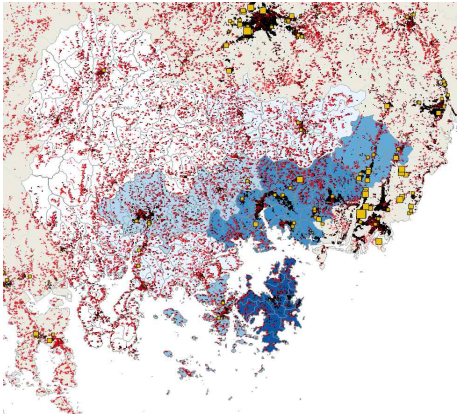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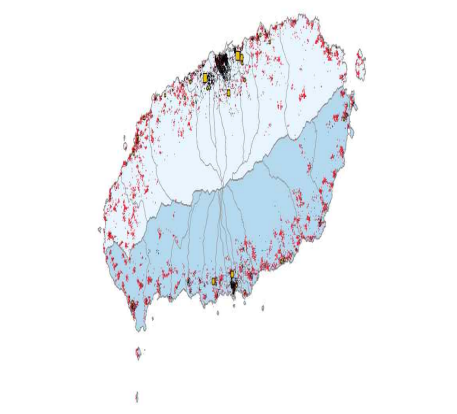


〈충청북도〉



〈충청남도〉



<p>〈전라북도〉</p>	<p>〈전라남도〉</p>
	
<p>〈경상북도〉</p>	<p>〈경상남도〉</p>
	
<p>〈제주도〉</p>	
	

4.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 모델

- 지역사회보장의 특별 우대정책을 추진할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.
 - 행정구역 단위 및 평균함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단위 집합적 사회보장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
 -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, 복지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게 집중적으로 재원을 지정하여 지역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함.
- 지자체(시·군·구) 내 지역사회보장특구를 지정하고, 해당 소규모 특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기획·제공
 -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면밀히 적시하고, 문제해결 관점에서 지역복지 서비스 설계 및 지역 내 다양한 복지주체들 간 협력체계 마련
 - 지역사회 자원부족하고, 저소득계층이 밀집하여 있는 소규모 특정 지역을 ‘지역사회보장특구’로 선정
 - 다년간 지원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 하여, 특정지역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소
 -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집합적 접근(Collective approach) 방식 적용
 - 취약지역의 복지기획 역량 제고 및 민관협력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자체 해결능력 축적·강화
- 복잡한 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주체들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복지 서비스 기획·제공 및 중장기 기반 구축
 - 인력채용, 중장기 계획수립, 시범사업 실시 및 필요 시설 등 보강
 - 핵심 사업 선정 및 집행

○ 핵심 사업 지속 수행과 사업 확산

□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집행에 필요한 정책모델 마련

○ 정책모형: 사업목적, 선정방식, 집행방식, 평가방식 등 종합모델 마련

○ 사업목적: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화

○ 선정방식: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필요한 방식 및 기준 마련

○ 재원구성: 일반회계, 기금,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매칭방법 제시

○ 집행방식: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, 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방식 정교화

○ 평가방식: 과소지역 지원 후 평가 및 정책환류 체계 마련

□ (방향) 지역사회보장특구 설정, 계획수립, 프로그램 집행, 사후관리체계 마련

○ 특구 설정 및 추진기반 구축, 복지문제 대응 계획수립, 특구 프로그램 집행, 지속가능 집행체계 마련

□ (목적) 시군구 스스로 특정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 내 특구지역을 설정

○ (저소득층 대상지)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비율, 임대주택 세대 규모 등 고려

○ (서비스 취약지) 다문화, 노인, 저소득 근로자 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욕구가 높으나, 복지자원 등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

□ (사업 추진 기반) 특구중심의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

○ (중간지원조직) 시군구는 특구사업을 추진할 협력기관을 설정하고, 해당 기관에 본 사업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마련

○ (협력 네트워크)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주체 간 연계체계 마련

- 지역사회보장특구 팀장 포함 3인으로 구성하고,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연계체계 마련

□ (특구 계획 수립) 특구 내 복지문제 해결중심의 복지 기반 및 프로그램 기획

- 특구 신청서 작성 시 기초적인 계획수립 후 특구사업 1년차에서 면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향후 이행전략 수립

- 1년차에서 중장기 특구 복지문제 해결계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후 반영

□ (특구 프로그램) 복지문제 해결중심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집행

- 특구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복지 프로그램 선정이 가능하고, 1차 년도에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2차 년도부터 핵심사업 수행

- 특구지역의 복지문제는 복합적·가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

- 특구 지역에서는 주민 간 신뢰, 주거, 교육, 문화 관련 다양한 복지문제들이 상존한다는 점에서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중지원이 필요

□ 사업운영 및 관리 체계

- (복지부) 사업시행계획 및 세부 가이드라인 등 정책 컨설팅 제고

- (사업컨설팅) 사업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 등

- (광역자치단체) 광역사업이므로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마련

- (사업관리) 시군구 사업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체계 마련

- (기초자치단체)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

- (사업집행) 지역 내 관계기관(예, 복지관, 협의회 등)과 컨소시엄 집행

- (정책지원) 지역복지 전문 연구기관(중앙+광역) 간 정책네트워크 구성

- 특구 사업 연차별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수행

- (성과분석) 지역별로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분석(질적+양적평가)

- 지역 사업 실적분석, 질적평가·모니터링(사전사후 변화 등)

- (성과확산) 전국 확산모델 발굴 및 홍보

□ 지역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(사업기간) 2020년1월~3년간 (매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다음해 지원 결정)
- (사업규모) 24억원(국비 9.6억원)
 - (재원) 국비, 지방비, 민간재원으로 구성하되, 중앙이 국비와 민간재원으로 50%를 부담하고, 광역자치단체가 50%를 부담
- (지원규모) 8개 시군구에 3억씩 3년간 지원
- (사업대상) 관할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단지,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, 기타 특정 사회보장 영역의 문제를 보유한 지역*이 있으나 재정 및 복지제공 수준이 취약하여 지역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자체
- (추진체계) 중앙(복지부-균형발전지원센터)-광역자치단체(시도-자문연구기관) -기초자치단체(시군구-민간협력기관)의 협업체계 구축
- (지역 선정) 복지부 선정 40개 시·군구, 시도 선정 20개 지역의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8개 시·군구 선정
 - (후보선정기준) 기초수급자 비율이 인구의 10%이상(전국평균 3%)인 읍·면·동이 있는 시·군구 중 재정자주도 및 복지제공 수준 하위지역
- (심사) 선정위원회 구성, 서면 및 현지평가 등 심사
 -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지역 확정
- (사업내용) 시·군구 내 지원 지역 선정 및 전문인력 확보, 맞춤형 지역복지 R&D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돌봄 관계망 강화·사회적 배제 예방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여 추진
 - ①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하고, 저소득 계층이 밀집하여 있는 특정 지역을 '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'으로 선정
 - ② 지역사회보장 전문인력 확보(1~2명의 전문인력 채용 가능)
 -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종합사회복지관, 사회복지법인·단체, 대학 등 협력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체계 구축

- ④ 지역복지 R&D, 지역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
 -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공통문제로서 지역 내 정서적 소외, 심리 불안, 복지 접근성 약화, 지역돌봄 부족 등의 해소에 적극 대응
 -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복지증진 및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
 - 기반조성 등과 관련하여 타 부처 사업과 패키지화하여 진행 가능
- (사업제외) ①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 취지에 반하는 사업
- (사업점검) 매년 진행 상황 등의 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

5.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 대상지역 분석

□ 보건복지부 대상지역 선정방법

- 행정자료 기반 지역복지 수준 분석
 - 읍면동 단위 인구 대비 수급자(주거, 차상위) 비중 상위 3% 지역
 - 시군구 단위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세대수
 - 시군구 단위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
-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격차 분석
 - 지역사회보장지표 기반 서비스격차 종합등급 산출
 -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 요인을 포함한 돌봄(아동, 성인), 교육, 안전, 건강, 고용, 주거, 문화여가, 환경, 지역인프라 등 10개 영역 224개 지표 (2018년 기준)

□ 광역자치단체 추천 방법

- 시·도 스스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취약지역 추천
 - 복지부에서 既 고려한 경제적 취약계층(기초수급, 임대주택 등) 외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가 높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추천

○ 시·도 내 시·군·구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(1~2개 지역 추천)

- 20개 이상 시·군·구 관할 시·도(서울, 경기, 전남, 경북)는 2개 지역을 추천하고, 그 외 시·도는 1개 지역 추천

○ 서비스 취약계층(예, 노인, 다문화 등) 밀집지역

- 읍면동 주민 대비 독거노인, 다문화, 저소득 농어업인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

○ 시·도에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파악 후 해당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특구 제한공모에 추천

- 17개 시·도별로 1~2개 지역을 복지부로 추천, 이후 제한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, 지원

□ 보건복지부 대상지역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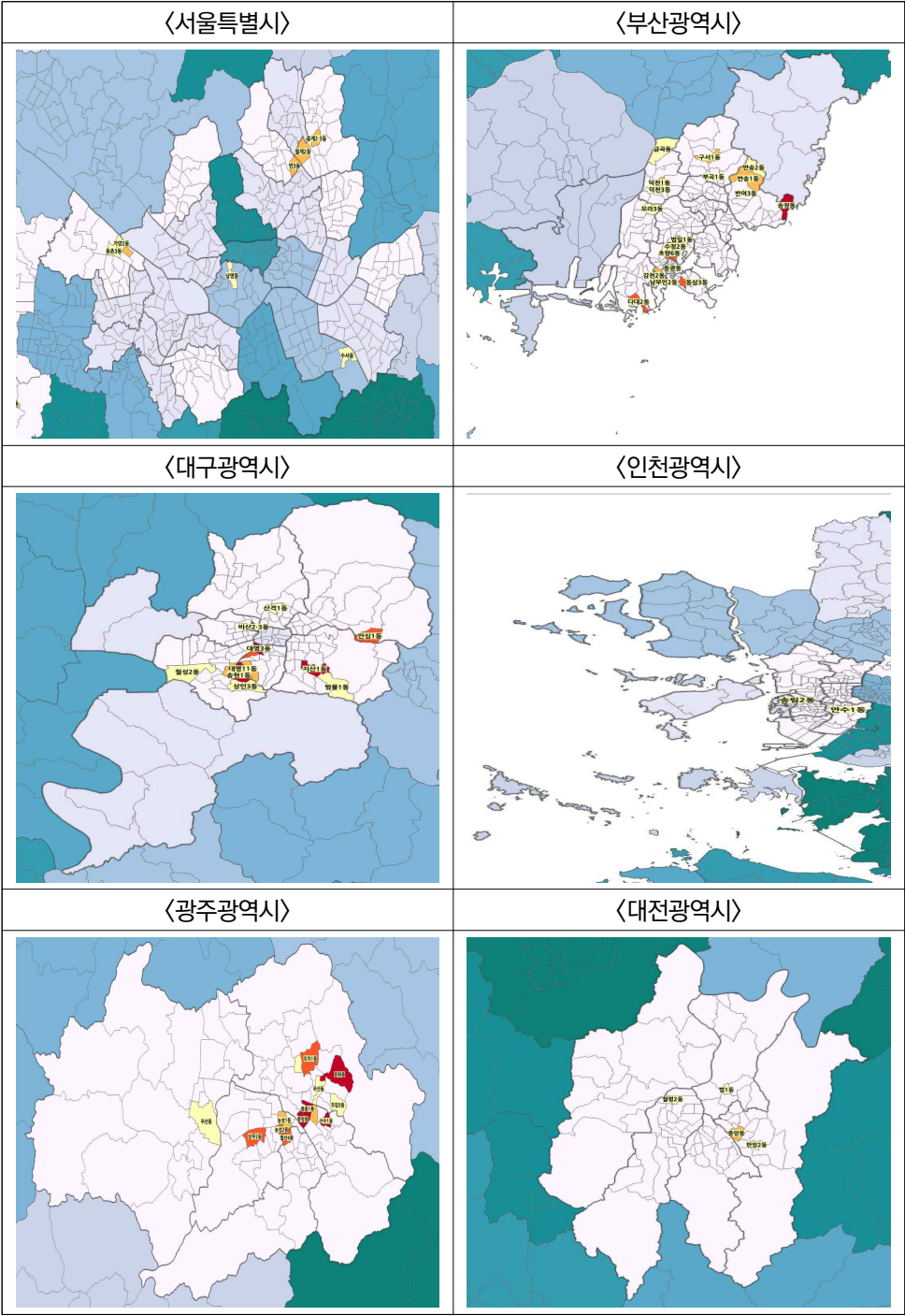
○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인구 대비 기초생활(주거)와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중 3%

구분	시군구		
	시	군	구
시	서울(4)		강남구, 강북구, 강서구, 노원구
	부산(4)		북구, 사상구, 영도구, 해운대구
	대구(4)		달서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
	인천(2)		남동구, 중구
	광주(5)		광산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서구
	대전(3)		대덕구, 동구, 서구
도	경기(1)	동두천시	
	강원(1)	춘천시	
	충북(1)	청주시	
	전북(8)	군산시, 김제시, 남원시, 익산시, 전주시, 정읍시	부안군, 임실군
	전남(4)	나주시, 목포시	영광군, 화순군
	경북(1)		울진군
	경남(2)	밀양시, 통영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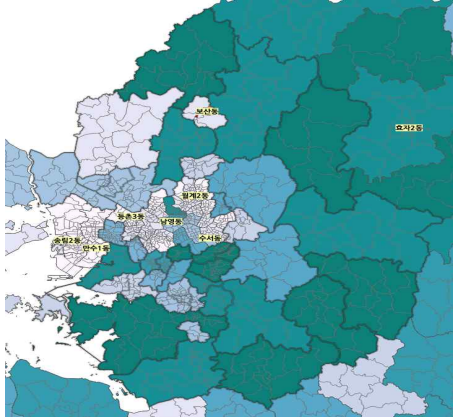
○ 시군구 기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시도	시군구	시군구 구분	취약계층 밀집 상위 3% 읍면동 (개소)	임대주택 (세대수)	서비스 격차 (등급)	재정 자립도 (%)	재정 자주도 (%)
서울특별시	강남구	구	1	3,630	7	54.4	55.8
서울특별시	강북구	구	1	4,181	7	16.8	42.1
서울특별시	강서구	구	3	8,184	9	19.7	38.2
서울특별시	노원구	구	2	7,459	8	15.4	41.2
부산광역시	북구	구	3	8,193	10	13.3	26.8
부산광역시	사상구	구	1	5,827	9	19.0	30.7
부산광역시	영도구	구	2	2,944	6	9.5	29.9
부산광역시	해운대구	구	4	3,428	10	27.4	34.3
대구광역시	달서구	구	4	8,363	10	22.6	32.4
대구광역시	동구	구	1	7,401	8	16.9	29.8
대구광역시	북구	구	1	8,884	8	17.4	30.5
대구광역시	수성구	구	2	978	10	28.1	38.7
인천광역시	남동구	구	1	17,152	7	22.8	32.9
인천광역시	중구	구	1	1,554	6	42.0	50.9
광주광역시	광산구	구	1	11,726	8	20.0	31.3
광주광역시	남구	구	1	4,906	8	11.9	30.1
광주광역시	동구	구	2	264	4	11.7	31.6
광주광역시	북구	구	5	13,601	7	13.8	26.8
광주광역시	서구	구	3	4,411	8	20.1	31.6
대전광역시	대덕구	구	1	1,629	8	15.0	30.7
대전광역시	동구	구	2	6,937	6	10.8	29.4
대전광역시	서구	구	1	4,880	7	17.6	28.6
경기도	동두천시	시	1	1,543	4	12.7	49.5
강원도	춘천시	시	2	6,163	5	22.3	62.0
충청북도	청주시	시	1	14,615	7	31.9	56.9
전라북도	부안군	군	1	462	2	6.5	52.5
전라북도	임실군	군	1	374	1	5.7	59.3
전라북도	군산시	시	5	7,912	5	20.2	54.7
전라북도	김제시	시	6	1,534	1	9.0	55.4
전라북도	남원시	시	3	1,443	1	7.7	59.4
전라북도	익산시	시	2	8,174	3	16.7	55.2
전라북도	전주시	시	3	8,534	6	28.9	52.9
전라북도	정읍시	시	3	2,697	2	8.5	57.1
전라남도	영광군	군	1	531	3	10.2	56.7
전라남도	화순군	군	1	111	2	18.1	65.6
전라남도	나주시	시	1	2,049	3	18.4	54.1
전라남도	목포시	시	5	5,817	5	18.7	52.8
경상북도	울진군	군	1	365	2	9.8	59.4
경상남도	밀양시	시	1	2,023	4	14.4	61.2
경상남도	통영시	시	1	1,731	6	13.9	5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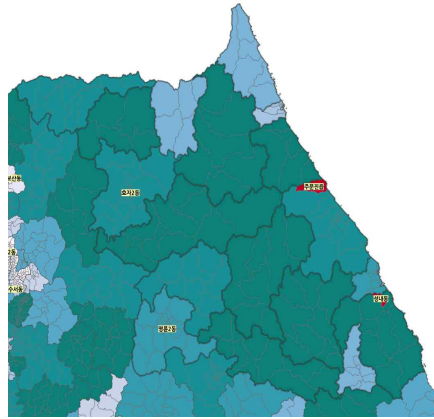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재정자주도 및 수급자 비중 상위지역 (보고서 상 [그림 4-24] ~ [그림 4-38]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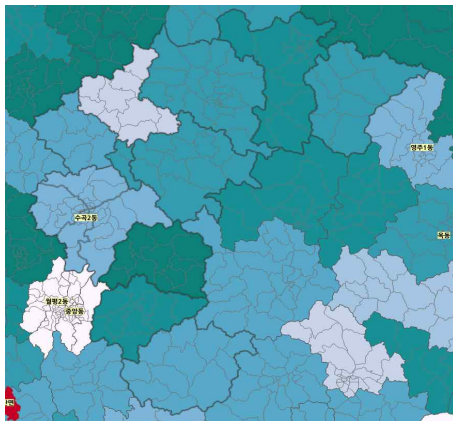
〈경기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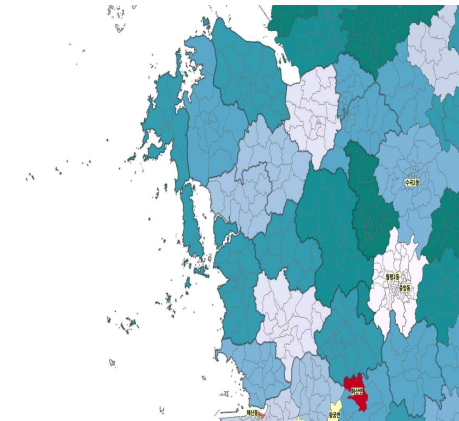
〈강원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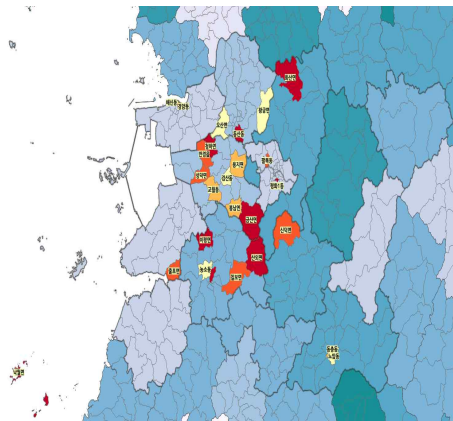
〈충청북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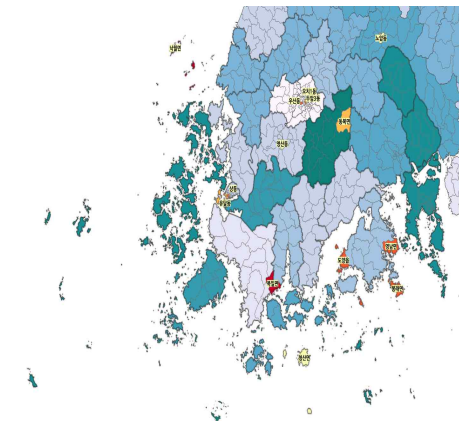
〈충청남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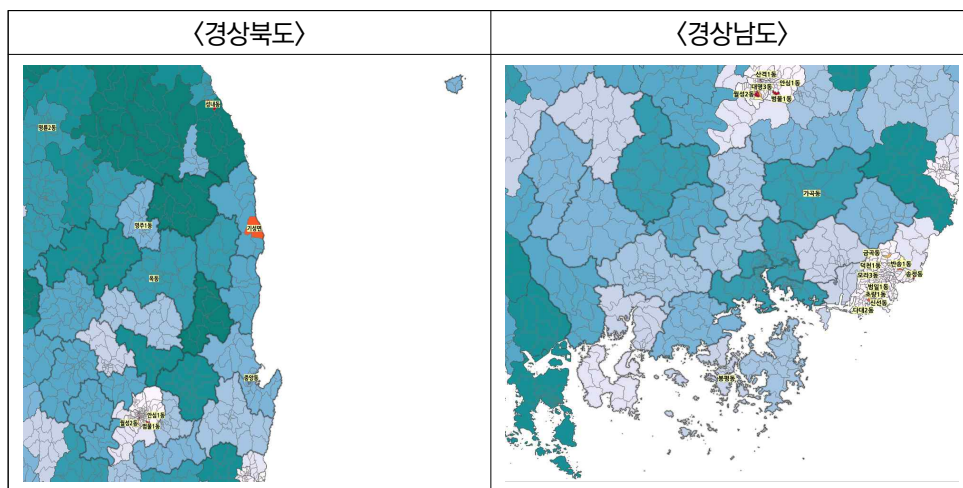


〈전라북도〉



〈전라남도〉





주: 시군구별 재정자주도(10분위)를 배경 레이어로 설정하고, 인구 대비 수급자 비중(4분위)를 표기하였음.1)

1) [그림 3] 재정자주도 및 수급자 비중 상위지역 범례

구분	설명	범례
인구 대비 수급자 비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분위 - 수급자 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 인구대비 수급자 비중이 10% 이상인 126개 지역 중 각 지역별 수급자 비율 백분율 순위로 4분위 산출 - 1에 가까울수록 수급자비중 높은 지역, 4에 가까울수록 수급자 비중 낮은 지역 	
재정자주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분위 - 1에 가까울수록 취약, 10에 가까울수록 우수 	

붙임1. 지자체별 자료분석 결과

□ 분석개요

- 행정자료를 토대로 개별 읍면동 단위 자료 분석
 - 읍면동 별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수급자(주거급여+차상위경감) 비중을 통해 수급자 밀집지역을 확인
 - 읍면동 단위 임대주택(영구+국민임대) 세대수를 통해 임대주택 밀집지역 파악

□ 측정지표

- 인구 대비 수급자 비중
 - 읍면동(행정동) 별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수급자(주거급여+차상위경감) 수를 백분율로 산출
 - 자료출처: 사회보장정보시스템
 - 자료시점: 2019년 6월말 기준
- 읍면동(행정동) 단위 임대주택 세대수
 - 읍면동(행정동) 별 임대주택(영구+국민임대) 세대수
 - 자료출처: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단지 정보
 - 자료시점: 2019년 6월말 기준

〈부표 2〉 지역별 수급자(기초+차상위) 비중 및 임대주택 현황

구분	시도	시군구 현황(개소)	주민수 대비 수급자(주거+차상위) 비중(%)			임대주택 수(세대수)		
			평균	최소값	최대값	평균	최소값	최대값
시	서울	25	4.88%	0.93%	12.82%	2,011	-	6,186
	부산	16	2.79%	0.06%	12.47%	2,070	-	6,860
	대구	8	4.48%	0.36%	12.86%	1,730	-	5,855
	인천	10	4.92%	0.32%	10.84%	1,616	-	4,948
	광주	5	6.51%	0.98%	22.63%	1,575	-	7,438
	대전	5	5.83%	0.63%	24.51%	1,455	-	5,991
	울산	5	4.84%	0.19%	24.80%	906	-	1,386
	세종	-	5.75%	0.36%	39.37%	664	-	1,684
도	경기	31	3.33%	0.02%	19.27%	1,946	-	8,673
	강원	18	2.22%	0.38%	4.56%	553	-	2,678
	충북	11	2.52%	0.48%	6.58%	939	-	4,285
	충남	15	4.31%	0.21%	13.74%	626	-	1,728
	전북	14	6.10%	0.17%	16.44%	733	-	3,147
	전남	22	7.23%	0.24%	21.15%	813	-	2,245
	경북	23	4.21%	1.61%	10.05%	591	-	3,070
	경남	18	3.87%	0.02%	9.74%	921	-	2,968
	제주	2	4.42%	0.66%	15.99%	602	-	2,171
총합계		228	4.57%	0.02%	39.37%	1,183	-	8,673

주: 읍면동 별 주민수 대비 수급자 현황과 임대주택 세대수 평균, 최소값, 최대값을 시도 단위로 제시(예를 들어 서울의 수급자 비중은 전체 동의 평균값이 4.88%이며, 수급자 비중이 가장 적은 동에서는 0.93%, 가장 많은 동의 경우 12.82%임)

붙임2.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 측정 및 격차 분석

□ 분석개요

-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측정단위로 하여 서비스 수준을 확인함.
-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 수요, 공급, 산출공급을 점수화한 종합 수준으로 시군구 단위 지역 비교 분석
- 전체 40개 지표의 자료를 표준화하고, 70점에서 100점 사이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임.
- 종합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 수요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
 - 본 연구에서는 10분위로 환산하여 제시(1분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수요의 격차가 크고, 10분위에 가까울수록 작다는 것을 의미)

□ 측정지표

-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대분류 3개(수요, 공급, 산출성과), 중분류 7개, 소분류 21개, 세분류 6개로 구분되며, 평가지표는 총 40개로 구성
 - 수요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로 일반 복지대상 인구집단,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특정 복지대상 인구의 비중으로 산출
 - 공급은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 수준으로 자원의 제공과 배분을 의미함. 재정, 인력·시설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 수요 대비 공급량의 비율로 산출
 - 산출성과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률 또는 수급률, 그리고 생활수준 또는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질적 변화 측정

〈부표 1〉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	측정치표	지표산식	
수요	일반 육구 복지 대상	일반 복지대상		자치단체 인구수	- 자치단체 인구수	
				복지대상인구 규모와 비중	- (복지대상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생애주기별 복지대상		영유아(만 6세 미만) 인구 규모와 비중	- (영유아 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		아동/청소년(만 6-18세) 인구 비중	- (아동청소년 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		50+ 세대(만 50-64세) 인구규모비중	- (50+세대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		노인(만 65세 이상) 인구 규모와 비중	- (노인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가구형태별 복지대상		1인 가구 규모와 비중	- (1인가구 세대수/지자체 세대수) × 100		
			독거노인 규모와 비중	- (독거노인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	
	특수 육구 복지 대상	저소득층		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와 비중	- (기초수급자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		차상위계층 규모와 비중	- (차상위계층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취약계층		등록장애인 규모와 출현율	- (등록장애인 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				장애인돌봄육구	- (65세 미만 등록장애인수 + 65세 미만 13급 장애인) / 전체 인구	
				노인돌봄육구	- (80세 이상 노인 + 독거 노인) / 전체 인구	
				다문화가정 규모와 비중	- (다문화가정 인구수/지자체 인구수) × 100	
공급	재정 지표	재정능력		재정자립도(%)	- (자주재원/전체 재원) × 100	
				재정자주도(%)	- (일반재원/일반회계 예산규모) × 100	
		사회복지 예산		1인당 사회복지예산	-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(예산액) / 인구수	
			부분별 예산	돌봄(아동)	영유아 1인당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	-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 / 6세 미만 영유아 수
				돌봄(성인)	노인 1인당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예산	-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/ 65세 이상 인구수
				건강	1인당 보건예산	- 보건 지출액(예산액) / 인구수
	교육	학생 1인당 교육예산		- 교육예산 / 초·중고 학생수		
	산출 · 성과	인력 / 시설 지표	총 공무원 수		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수	- 전체 공무원수 / 지자체 인구수 * 1,000
				돌봄	돌봄(아동)	영유아천명당설립특별어린이집 정원
			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 정원		- 국공립 어린이집 총정원 / 6세 미만 영유아 * 1,000	
돌봄(성인)			65세 이상 인구 1인당 장기요양시설	- 장기요양시설수 / 65세 이상 인구수		
건강				인구 1만명당 병상수	- (총 병상수 / 지자체 인구수) * 10,000	
				인구 1만명당 의사수	- (총 의사수 / 지자체 인구수) * 10,000	
교육			교사 1인당 학생수	- (초·중고 학생수 / 초·중고 교사수)1)		
			인구 1만명당 학교수	- 학교수 / 인구수 * 10000		
			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	- 평생교육기관 수 / 단위인구		
		돌봄	보육	어린이집 이용률	- (어린이집 이용아동 / 전체 어린이수) * 100	
국공립보육	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		- (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/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수) * 100			
보육인증	어린이집 평가인증률		- (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/ 전체 어린이집 수) * 100			
장기요양	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비율		- (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/ 전체 노인) * 100			
건강	의료이용		환자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	-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		
	건강수준		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	-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		
교육	학업성취		학업미충단율	- 학업미충단율(1-학업미충단율)		
	평생교육		평생교육 프로그램	-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수		
	평생학습	평생교육 참여율	- 평생학습 참여율			

주: 1) 척도가 반대인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역수로 전환하여 산출
자료: 함영진 외(2018: 93-94).

□ 분석 방법

- (지표선정)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
- (표준화) 척도가 동일하더라도 지표 간 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비교가 어려워, 측정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활용
- (가중치) 지표별 중요성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지표 간 가중치 설정
- (종합화) 전체 사회서비스 격차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종합전환

구분	주요 내용
지역사회보장지표	- 기초자치단체별 지פות값
개별지표별 표준화	- 지표 간 측정단위 차이 보정을 위해 표준화점수로 변환 - 정규분포 가정
지표 가중치 산정	- 개별지표의 종합화를 위해 지표별 가중치 부여 - AHP 분석결과 반영
종합화	- 표준화 및 가중치 반영 후 종합지수 산출

□ 지자체 유형분류²⁾

○ 시군구 유형

- 유형① 대도시형: 인구 50만 이상 시(15개)
- 유형② 중소도시형: 인구 50만 이하 시(24개) + 세종시(1개)
- 유형③ 제한도시형: 특별시 자치구, 광역시 자치구(69개)
- 유형④ 도농형: 도·농 복합시(36개) + 제주시, 서귀포시(2개)
- 유형⑤ 농촌형: 농촌군(82)

2)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준용(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준인건비 제도의 운영 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화 수준을 바탕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)(함영진 외, 2018)

□ 분석결과

○ 시군구별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 종합지수를 토대로 10분위 산출

- 종합지수는 낮을수록 수요 대비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취약지역을 의미
- 종합지수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위백분율(0-100%)과 분위(1-10) 산출
 - 순위백분율은 0%에 가까울수록, 분위는 1에 가까울수록 취약지역(순위 백분율이 100%에 가까울수록, 분위는 1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지역임)

시도	시군구	시군구 유형	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(낮을수록 취약지역)		
			종합지수	순위백분율	분위
서울	종로구	3	81.59	61.1%	7
서울	중구	3	82.45	71.2%	8
서울	용산구	3	78.69	23.6%	3
서울	성동구	3	78.25	13.1%	2
서울	광진구	3	78.19	11.8%	2
서울	동대문구	3	79.31	34.5%	4
서울	중랑구	3	78.81	25.8%	3
서울	성북구	3	78.07	9.2%	1
서울	강북구	3	79.27	32.8%	4
서울	도봉구	3	78.37	16.6%	2
서울	노원구	3	78.93	27.5%	3
서울	은평구	3	77.90	5.2%	1
서울	서대문구	3	79.21	31.0%	4
서울	마포구	3	78.17	11.4%	2
서울	양천구	3	78.15	10.5%	2
서울	강서구	3	78.34	16.2%	2
서울	구로구	3	78.31	15.3%	2
서울	금천구	3	80.05	44.1%	5
서울	영등포구	3	79.70	39.3%	4
서울	동작구	3	78.27	14.0%	2
서울	관악구	3	77.95	7.4%	1
서울	서초구	3	78.23	12.7%	2
서울	강남구	3	79.29	33.6%	4
서울	송파구	3	77.84	4.4%	1
서울	강동구	3	78.16	10.9%	2
부산	중구	3	82.16	66.8%	7
부산	서구	3	81.27	54.1%	6
부산	동구	3	82.43	70.7%	8
부산	영도구	3	80.75	49.3%	5
부산	부산진구	3	78.65	23.1%	3
부산	동래구	3	77.38	2.2%	1
부산	남구	3	77.31	1.7%	1
부산	북구	3	77.62	3.1%	1
부산	해운대구	3	78.10	9.6%	1
부산	사하구	3	78.04	8.3%	1
부산	금정구	3	78.47	18.3%	2

시도	시군구	시군구 유형	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(낮을수록 취약지역)		
			종합지수	순위백분율	분위
부산	강서구	3	76.18	0.4%	1
부산	연제구	3	77.47	2.6%	1
부산	수영구	3	77.95	7.0%	1
부산	사상구	3	78.39	17.0%	2
부산	기장군	5	79.24	31.4%	4
대구	중구	3	81.49	59.4%	6
대구	동구	3	78.92	27.1%	3
대구	서구	3	79.42	36.2%	4
대구	남구	3	81.36	56.3%	6
대구	북구	3	78.58	21.0%	3
대구	수성구	3	77.91	5.7%	1
대구	달서구	3	77.92	6.1%	1
대구	달성군	5	78.44	17.9%	2
인천	중구	3	79.89	41.0%	5
인천	동구	3	80.11	44.5%	5
인천	남구	3	78.30	14.4%	2
인천	연수구	3	78.21	12.2%	2
인천	남동구	3	79.43	37.1%	4
인천	부평구	3	79.15	30.1%	4
인천	계양구	3	78.51	20.1%	3
인천	서구	3	78.53	20.5%	3
인천	강화군	5	81.64	62.0%	7
인천	옹진군	5	82.32	69.4%	7
광주	동구	3	82.09	66.4%	7
광주	서구	3	78.82	26.6%	3
광주	남구	3	78.74	24.5%	3
광주	북구	3	79.33	34.9%	4
광주	광산구	3	79.10	29.7%	3
대전	동구	3	80.27	46.7%	5
대전	중구	3	80.22	45.9%	5
대전	서구	3	79.25	31.9%	4
대전	유성구	3	78.04	8.7%	1
대전	대덕구	3	78.97	28.4%	3
울산	중구	3	76.88	1.3%	1
울산	남구	3	77.99	7.9%	1
울산	동구	3	77.72	3.5%	1
울산	북구	3	76.71	0.9%	1
울산	울주군	5	78.77	25.3%	3
세종	세종	2	79.37	35.4%	4
경기	수원시	1	78.25	13.5%	2
경기	성남시	1	79.02	29.3%	3
경기	의정부시	2	79.95	41.9%	5
경기	안양시	1	78.48	19.2%	2
경기	부천시	1	79.29	33.2%	4
경기	광명시	2	78.30	14.8%	2
경기	평택시	4	78.96	27.9%	3
경기	동두천시	2	81.65	62.4%	7
경기	안산시	1	80.01	42.8%	5
경기	고양시	1	78.51	19.7%	2

시도	시군구	시군구 유형	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(낮을수록 취약지역)		
			종합지수	순위백분율	분위
경기	파천시	2	79.26	32.3%	4
경기	구리시	2	79.51	38.0%	4
경기	남양주시	1	78.47	18.8%	2
경기	오산시	2	78.74	24.0%	3
경기	시흥시	2	79.20	30.6%	4
경기	군포시	2	78.33	15.7%	2
경기	의왕시	2	78.39	17.5%	2
경기	하남시	2	77.85	4.8%	1
경기	용인시	1	77.94	6.6%	1
경기	파주시	2	78.75	24.9%	3
경기	이천시	2	80.36	47.2%	5
경기	안성시	2	80.24	46.3%	5
경기	김포시	2	78.64	22.7%	3
경기	화성시	1	78.82	26.2%	3
경기	광주시	2	78.13	10.0%	2
경기	양주시	2	80.01	43.7%	5
경기	포천시	2	81.40	57.2%	6
경기	여주시	4	81.02	52.0%	6
경기	연천군	5	82.87	76.4%	8
경기	가평군	5	83.62	85.2%	9
경기	양평군	5	80.67	48.0%	5
강원	춘천시	4	81.31	55.5%	6
강원	원주시	4	80.77	50.2%	6
강원	강릉시	4	81.69	62.9%	7
강원	동해시	2	80.75	49.8%	5
강원	태백시	2	82.89	76.9%	8
강원	속초시	2	81.93	65.1%	7
강원	삼척시	4	82.73	73.4%	8
강원	홍천군	5	81.17	52.8%	6
강원	횡성군	5	82.20	68.1%	7
강원	영월군	5	82.84	75.5%	8
강원	평창군	5	80.37	47.6%	5
강원	정선군	5	83.02	79.0%	8
강원	철원군	5	81.45	58.1%	6
강원	화천군	5	82.55	72.1%	8
강원	양구군	5	81.92	64.6%	7
강원	인제군	5	81.26	53.7%	6
강원	고성군	5	83.25	82.5%	9
강원	양양군	5	82.28	68.6%	7
충북	청주시	1	79.54	38.4%	4
충북	충주시	4	81.40	56.8%	6
충북	제천시	4	81.82	63.8%	7
충북	보은군	5	83.25	82.1%	9
충북	옥천군	5	83.03	79.5%	8
충북	영동군	5	83.50	84.3%	9
충북	증평군	5	79.43	36.7%	4
충북	진천군	5	81.12	52.4%	6
충북	괴산군	5	83.63	85.6%	9
충북	음성군	5	81.52	60.3%	7

시도	시군구	시군구 유형	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(낮을수록 취약지역)		
			종합지수	순위백분율	분위
충북	단양군	5	84.20	90.8%	10
충남	천안시	1	79.30	34.1%	4
충남	공주시	4	82.91	77.3%	8
충남	보령시	4	81.24	53.3%	6
충남	아산시	4	80.11	45.0%	5
충남	서산시	4	80.00	42.4%	5
충남	논산시	2	83.14	80.3%	9
충남	계룡시	2	78.59	21.4%	3
충남	당진시	4	79.94	41.5%	5
충남	금산군	5	83.81	87.3%	9
충남	부여군	5	82.97	78.6%	8
충남	서천군	5	84.57	93.0%	10
충남	청양군	5	82.79	74.7%	8
충남	홍성군	5	80.81	50.7%	6
충남	예산군	5	81.35	55.9%	6
충남	태안군	5	80.71	48.5%	5
전북	전주시	1	80.15	45.4%	5
전북	군산시	4	81.47	59.0%	6
전북	익산시	4	82.55	71.6%	8
전북	정읍시	4	83.36	83.4%	9
전북	남원시	4	84.42	92.1%	10
전북	김제시	4	84.97	95.6%	10
전북	완주군	5	81.61	61.6%	7
전북	진안군	5	85.58	98.7%	10
전북	무주군	5	84.84	94.8%	10
전북	장수군	5	84.69	93.4%	10
전북	임실군	5	84.72	93.9%	10
전북	순창군	5	85.16	96.1%	10
전북	고창군	5	84.11	90.0%	9
전북	부안군	5	83.92	88.2%	9
전남	목포시	2	81.30	55.0%	6
전남	여수시	4	80.83	51.1%	6
전남	순천시	4	80.74	48.9%	5
전남	나주시	4	82.64	72.5%	8
전남	광양시	4	80.01	43.2%	5
전남	담양군	5	82.77	73.8%	8
전남	곡성군	5	85.33	96.9%	10
전남	구례군	5	85.43	97.8%	10
전남	고흥군	5	86.46	100.0%	10
전남	보성군	5	85.71	99.1%	10
전남	화순군	5	84.11	90.4%	10
전남	장흥군	5	85.18	96.5%	10
전남	강진군	5	83.69	86.9%	9
전남	해남군	5	82.84	75.1%	8
전남	영암군	5	81.79	63.3%	7
전남	무안군	5	80.92	51.5%	6
전남	함평군	5	84.30	91.7%	10
전남	영광군	5	82.78	74.2%	8
전남	장성군	5	83.41	83.8%	9

시도	시군구	시군구 유형	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(낮을수록 취약지역)		
			종합지수	순위백분율	분위
전남	완도군	5	83.30	83.0%	9
전남	진도군	5	84.21	91.3%	10
전남	신안군	5	83.13	79.9%	8
경북	포항시	1	79.46	37.6%	4
경북	경주시	4	79.69	38.9%	4
경북	김천시	4	82.07	65.9%	7
경북	안동시	4	82.95	77.7%	8
경북	구미시	4	79.01	28.8%	3
경북	영주시	4	82.06	65.5%	7
경북	영천시	4	82.32	69.0%	7
경북	상주시	4	82.68	72.9%	8
경북	문경시	4	82.95	78.2%	8
경북	경산시	4	79.77	39.7%	4
경북	군위군	5	83.15	80.8%	9
경북	의성군	5	84.72	94.3%	10
경북	청송군	5	83.64	86.0%	9
경북	영양군	5	86.20	99.6%	10
경북	영덕군	5	85.44	98.3%	10
경북	청도군	5	83.89	87.8%	9
경북	고령군	5	82.43	70.3%	8
경북	성주군	5	81.30	54.6%	6
경북	칠곡군	5	79.38	35.8%	4
경북	예천군	5	83.16	81.2%	9
경북	봉화군	5	83.23	81.7%	9
경북	울진군	5	84.04	89.5%	9
경북	울릉군	5	82.36	69.9%	7
경남	창원시	1	78.60	21.8%	3
경남	진주시	4	81.44	57.6%	6
경남	통영시	4	79.88	40.6%	5
경남	사천시	4	82.17	67.2%	7
경남	김해시	1	78.62	22.3%	3
경남	밀양시	4	81.58	60.7%	7
경남	거제시	4	77.76	3.9%	1
경남	양산시	2	79.85	40.2%	5
경남	의령군	5	85.38	97.4%	10
경남	함안군	5	81.49	59.8%	6
경남	창녕군	5	82.20	67.7%	7
경남	고성군	5	82.87	76.0%	8
경남	남해군	5	84.48	92.6%	10
경남	하동군	5	83.67	86.5%	9
경남	산청군	5	84.90	95.2%	10
경남	함양군	5	83.99	88.6%	9
경남	거창군	5	83.57	84.7%	9
경남	합천군	5	84.00	89.1%	9
제주	제주시	4	81.92	64.2%	7
제주	서귀포시	4	81.46	58.5%	6